

# 오피니언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김형준



북한은 왜 연평도에 기습 포격을 감행했을까.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 전에 행한 일련의 행동들을 면밀히 고찰하면 윤곽이 드러난다.

올해 북한은 3월 천안함 폭침, 5월과 8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 11월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와 연평도 기습 포격 등 이례적인 행동들을 취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김정일의 두 차례 중국 방문은 3대 세습체제를 인정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문제는 이런 추정이 맞다면 북한은 철저하게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북한은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핵 전문가를 불러들이며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고, 뒤이어 연평도를 기습 포격했다. 더구나, 북한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개혁·개방 충고나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독자적인 무모한 행보를 계속 취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최대 현안은 3대 세습 체제 구축이 아니라 핵 무장을 통해 주체 국가로 거듭나 2012년에 강성 대국을 완성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의도와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일 수도 있다.

##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라

중국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되면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필연적으로 일본이 핵을 갖게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표면상으로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고 북한의 후원자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북한은 저항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

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전술을 구획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북한은 2006년 10월에 중국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1차 핵 실험을 단행했고, 이어 2009년 5월에는 2차 핵 실험까지 했다. 따라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이 할 수 없이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바로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로 인해 붙어 달칠 국제사회와 중국의 비난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김정일의 체제 장악 능력, 당, 군 공간기구의 통제력,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 등을 포함한 북한의 통제 역량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것이다. 이제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정부와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정부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말보다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하고, 국민들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단합된 모습으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 칼럼

윤장현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의학 분야를 담당하 빠르 속도로 발전하게 한다. 안과 치료 역시 변화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시력 교정술 역시 안정을 꾀는 것 외에 방도가 없던 시대가 었그제 같으나 벌써 레이저를 이용한 인트라 라식이나 안내 렌즈 삽입술 등 새로운 수술법이 각광받고 있다.

시력교정술의 빠르고 획기적인 진보는 엄격한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기준까지 훌쩍 뛰어났다. 무중력 상태, 적은 산소량, 건조한 공기 등 우주 공간의 각종 약조건을 견뎌야 하는 우주비행사에게 시력교정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신기술로써 개인의 맞춤형시력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기술을 통합해 수술하는 것을 ‘아이라식’이라고 한다.

아이라식의 장점은 훌륭한 시력 교정 결과뿐만 아니라, 라식의 부작용으로 가장 크게 꼽혔던 ‘야간 빛 번짐’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빛 번짐 현상은 눈을 구성하는 수정체와 유리체, 망막 등의 ‘광학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빛의 뒤튐림 현상과 지문 만큼 다양한 개개인의 각막 굴곡의 값(즉, 구위수차)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 채 교정수술을 하면서 생긴 부작용

## 라식수술도 과학이다

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술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NASA의 안과분야 컨설턴트 Steven C. Schallhorn박사는 2007년에 발표한 ‘Corneal Refractive Surgery’라는 제목을 가진 프리젠테이션에서 ‘Femtosecond Laser’와 ‘Wavefront-Guided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방대한 테스트와 최상의 결과들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주인의 시력을 교정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력교정술을 제공하는 핵심 테크놀로지라고 확신했다.

이 같은 NASA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기술을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펄토세컨 레이저’는 수술시 각막을 깎는 도구가 칼날에서 레이저로 바뀌면서 두께를 마이크로미터(μm·100만분의 1m) 단위로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Wavefront-Guided 테크놀로지’는 안구 전체의 수차를 정확하게 분석해내어 진정한 맞춤형 라식(Customized-Wavefront)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시력교정 결과를 얻으려면 각막의 모든 굴곡과 각막에서 망막까지의 빛 전달 도중에 존재하는 미세한 부분도 계산해야 한다. 이제는 아이라식을 통해 구위수차를 계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시력 문제점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분석해내어 맞춤형교정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하지만 의학이 일반 과학과 다른 점은 의사의 숙련과 경험이 최첨단 장비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일 것이다. 의사의 경험은 수많은 환자를 대하면서 오랜 시간 쌓여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얻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의사의 경험과 숙련이, 최첨단 장비 등과 조화를 이뤄야만 환자에게 최상의 수술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의학이 과학의 발전 속도와 비슷해져 가고 있는 요즘, 그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의사가 스스로에게 늘 채찍질을 해야 하는 시대가 드디어 온 것이다. (아이안과 원장)

## 타지역서 은 대학생들에 교통비 할인 지원 어떨까

광주 소재 대학에 다니는 타지역 학생에게 가장 큰 부담은 교통비다. 필자의 경우도 경기도의 집에 다녀오기 위해 한번에 6만 원씩 지출되는 교통비는 큰 부담이다.

대학생 한 명이 그 지역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상당하다. 특히 타지에서 온 학생일 경우 거주지 등 생활비를 추가로 지출하기 때문에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보다 더욱 많은 비용을 지르게 된다.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최근 동서울터미널에서 광주행 버스를 구매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강릉·삼척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교통비의 32%를 할인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운송 측

에 문의한 결과 조합 측이 이윤객을 늘리기 위해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냈다.

운수 업체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이 서로 협력해 광주지역 대학생들에게 교통비 할인을 지원해 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혜택을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학생들이 여러 학교를 저출입할 때는 작은 인센티브가 우위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2500만 명이 사는 수도권권의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삼성·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이삼성·전남대 신문방송학과

## 기고

이훈의



최근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지역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는 대형마트 허가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의 한복판에 서서 지난 10개월여 동안 고뇌하고 노력해왔던 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건축허가 이후에도 현명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는 지난 2월 초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중소상인 보호와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두 번이나 승소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점저지대책위와 정발 마음을 열고 수차례 대화를 해왔고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법의 현실은 엄정하였다. 만약 건축허가를 미룬다면 열악한 재정형편상 한달에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지역의 월세가 배상금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47만 북구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광주시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서 앞으로 점포 개설 등록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던 북구로서는 이번 광주시의 조

## 북구 대형마트 허가에 대한 소회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또다시 이를 반려하면서까지 대형마트 입점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건축주는 구청의 처분에 반발하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우리구에서는 지역상권 보호의 당위성과 인근 학교의 학습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며 7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하였다. 결국 우리구는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개월여 동안 두 차례의 건축허가 반려와 세 차례 법원 판결을 받은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청은 지역경제 보호와 인근 학교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며 고안하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건축허가를 막아 낼 길이 없어 법과 현실의 괴리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중소상인들로서는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건축을 반대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례제정은 참으로 시의적절했고 이러한 시의 발 빠른 대처가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시 조례와 곧 제정될 구 조례를 잘 활용해서 영세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철저하 하고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화하면서 향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상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형마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특히 대형마트 업체들도 상생과 양보로 중소상인들과 함께 공존한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광주시 북구 부구청장)

## 외국인 100만명 시대… 다문화가정 편견 버려야

해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다.

이 같은 사회현실 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들은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말 표현이 서툰 친구들과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는 평생 가슴의 상처로 남게 된다. (노광영·광주시 북구 용봉동)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한다.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기존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노광영·광주시 북구 용봉동)

## 시설

## 광주 區 경계조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오는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 지역 정치구간 경계조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동구와 서구의 인구를 감안할 때 국회의원 의석수가 기존 8석에서 6석으로 2석이나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조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18대 총선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10만4000명, 상한선은 31만2000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19대 총선을 치른다면 동구의 경우 다른 자치구와 통합, 서구는 갑과 을의 통합이 불가피하다. 동구와 서구의 지면 10월 말 인구가 각각 10만2782명, 30만4047명으로, 동구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고 서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운대 시장이 최근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지역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국회의원 시절 뼈저리게 느꼈으며,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려면 북구와 남구의 일부 등을 동구와 서구로 편입

시켜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위기감 때문이다.

사실 국회의원이 없는 동구만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동구는 광주의 정치 1번지이자 도시의 상징이 아닌가. 서구를 포함해 광주에서 국회의원 2명 줄어드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이자 국비 확보 등 불이익과도 직결된다. 자치구간 인구편차 역시 주민 복지 및 행정서비스의 격차를 불러 광주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제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선 4년 전 북구 풍향동과 두암3동의 동구 편입이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무산됐던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자치구간 합의, 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광역의원 등 정치권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광주시와 정치권의 대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

## 바닥권 광주·전남 초등학교 이대로 둘 건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이며 충격적이다. 지난 7월 전국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광주지역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남 초등학교도 1.6%로 4번째로 높았다. 이는 지역 초등학교 수준이 바닥권이라는 반증이다.

특히 전남의 학력수준 미달은 농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으나 교육여건이 양호한 광주에 학력미달 초등학교가 타지역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광주 초등학교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 않고선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전남초등 교육도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주는 등 학업성취도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학력저조 현상은 여전히

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하위 전국 20개 지역에 전남이 무려 14곳이나 포함될 정도다.

물론 학업성취도 평가는 보통 학력 이상과 미달로만 구분해 앞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수준으로, 개인, 학교, 교육청 전체 성과와는 별개다.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초등 학력은 중학교와 고교 교육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그냥 넘길 사안도 아니다.

물론 학업성취도 평가를 놓고 ‘졸세우기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광주·전남 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학력 저조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학교에 맞는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교육으로는 지역 인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 無 等 鼓

중세 가톨릭에서는 ‘악마의 옹호자(devil's advocate)’라는 직책이 있었다. 그에게는 새로운 성인 후보의 오점을 꼬치꼬치 파고들어 반대하는 역할이 맡겨졌다. 잘못된 인사가 성인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선의의 악역’이었다.

오늘날에도 여러 기업이 창조적인 토론을 위해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악마의 옹호자를 두고 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업체 ‘인텔’은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비판하는 ‘건설적인 대결’(constructive confrontation)’을 적극 권장하고 있을 정도다.

다양성 제도만 제 해결의 한 방법이다. ‘존슨앤드존슨’은 “다름이 성과를 낳는다”는 모토 아래 ‘최고 다양성 관리자(CDO)’를 두고 있다. GE, IBM에도 다양성 증진 임원이나 테스크포스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왕들이 자신의 잘못을 신하들이 비판하게 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언(求言)’하

곤 했다. 세종대왕이 토론 때마다 반대만 하는 재상 허조(1369~1349)를 끌지 못하게 했고 의견을 구했던 일은 유명한 일화다. 어떤 조직에도 있게 마련인 갈등을 무조건 나쁘다고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해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된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우리 사회에선 이런 역할 자체가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맹목적인

## 내기베이터



복종을 강요하는 리더들이 아직 많다. 정책이나 의견에 대한 다른 견해까지 리더 자신에 대한 반대는 아닌데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권형합이 걸림돌이다. 내기베이터(navigation)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장소리(nag)만 하는 자동차 동승차처럼 욕박지르기 일수다.

미국의 유수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은 최근 ‘내기베이터’(nagivator)’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이런 리더를 비꼬았다. 혹여나 물고구려 하는 말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김주성 여론매체부장 jnews@kwangju.co.kr

|   |                                  |                                    |                                    |
|---|----------------------------------|------------------------------------|------------------------------------|
| <b>光 卍 日 報</b>  |                                  | <i>The Kwangju Ilbo</i>            |                                    |
| 회장 <b>金鐘宅</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柳濟喆</b> 논설주간 <b>申港樂</b> 편집국장 <b>書庚完</b>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                                  | <b>광고문의 062-227-9600</b>           |                                    |
| 편집국내선<br>(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br>여론매체부 2200-621 | 경영지원국 2200-515<br>(F A X 222-8005) | 문화홍보국 2200-541<br>(F A X 222-0195) |
| 편집부 2200-649  | 제작팀 2200-621                     | 광고이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정경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대표 FAX 222-4918)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사회부 2200-616  | 조사부 2200-571                     | 기획사업국 2200-555                     | (F A X 02-773-9335)                |
| (대표 FAX 222-4267)   | 전신팀 2200-685                     |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                                    |
| <b>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                                  |                                    |                                    |